[보도자료]

자립성폭력대책위

자립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라북도의 자립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 관련 자립대책위 입장

- 문의 : 황지영 집행위원장(010-5663-5103)
- 자립성폭력대책위 메일 : jbjl@hanmail.net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자립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립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자립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 내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대책위원회입니다.

○ 전라북도는 오늘(17일) 자립복지재단에 대한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한 사회복지법인 자립복지재단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자립성폭력대책위의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경과보고]

2012년	7월 27일	자립복지재단 내부종사자 장애인성폭력 사건 고발장 접수
	10월 30일	자립성폭력사건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12월 3일	자립성폭력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2013년	3월 22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경찰소환 조사
	4월 2일	구속수사 촉구! 현직 원장 성폭력 추가 가해자 고발! 기자회견
	5월 9일	(가해자 측) 성폭력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방문
	5월 13일	자립복지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전,현직 시설장 고발! 기자회견
	5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자립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6월 2일	(가해자 가족)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¹⁾ 접촉 및 녹화
	6월 14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
	6월 18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성의원협의회 간담회
	7월 26일	전라북도 대책수립 촉구! 긴급 기자회견
	10월 29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일 대책위 피켓시위
	11월 4~5일	한국심리운동연구소 관찰진단프로그램 피해자 참여
	11월 15일	(자립원 사건) 검찰 송치
	12월 24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B씨 ²⁾ 접촉
	12월 31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B씨 접촉시도 ³⁾
2014년	1월 7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시도 자립성폭력대책위 전주시 생활복지과 항의전화
	1월 8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검찰소환 조사
	1월 15일	내부고발인 보호 촉구! 자립복지재단 행태 규탄! 기자회견
	1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구속
	2월 27일	자립복지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성폭력사건 1차 공판
	3월 24일	장애인성폭력사건 2차 공판(비공개)
	4월 21일	장애인성폭력사건 3차 공판(비공개)

-
- 1) 기혼. 남편, 아들과 함께 가해자 측 요청으로 가해자 집에 갔음.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 녹화 함.
 - 2) 기혼. 남편과 함께 공동생활거주했고 현재는 퇴소해서 자립생활 중.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생활가정 직원이 방문해서 B씨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확인한 적도 있음. 피해자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관련한 질문을 했다고 함
 - 3) B씨의 경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서 매우 무섭고 두려웠다고 하였고, 남편에게 계속 B씨가 어디있는지 물어봐서 남편도 매우 무섭고 괴로운 날이었다고 함.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강요하였음
A씨의 경우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주소를 알아서 찾아갔음.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자기 집의 주소를 누가 알려줬는지 매우 화가난다는 이야기를 함(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자립복지재단 직원으로 근무 중)

- 4월 28일 장애인성폭력사건 4차 공판(비공개)
- 5월 1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5차 공판
- 5월 26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6차 공판
- 6월 2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7차 공판
- 6월 9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8차 공판
- 6월 30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9차 공판
- 7월 3일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1,032장 접수
- 7월 7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10차 공판(변론종결)
- 7월 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541장 접수
- 7월 14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11차 공판(피고인 심문)
- 7월 1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전주지법 1심선고(피고인 각 징역15년)
전주지법 1심판결에 따른 대책위 기자회견
- 7월 18일 전주시 생활복지과 기습 피켓시위(시설폐쇄 촉구!)
- 7월 23일 자립성폭력대책위 전주시 생활복지과 면담
- 7월 24일 자립성폭력대책위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관리담당 면담
- 7월 28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지사 출근시간 피켓시위
- 7월 31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의의원 5분 발언(자립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 8월 11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지사 면담
- 9월 1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차 협의(위원장 선출, 협의회 역할 논의)
- 9월 15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2차 협의(판결문 및 법적 검토)
- 9월 23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1차 공판
- 9월 24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3차 협의(법적 검토, 대책논의)
- 10월 2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4차 협의(특별감사 논의)
- 10월 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2차 공판
- 10월 8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5차 협의(특별감사 최종의결, 대책논의)
- 10월 21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6차 협의(특별감사 최종 논의)
- 10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3차 공판
- 10.27~11.13 자립복지재단 특별감사(회계, 행정 및 시설운영, 인권전반)
- 11월 1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7차 협의(특별감사 중간점검 논의)
- 11월 24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8차 협의(이후 계획수립 논의)

	11월 25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4차 공판
	12월 3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9차 협의(도, 시 처분계획서 논의)
	12월 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5차 공판
	12월 10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0차 협의(특별감사 결과처분 논의)
	12월 18일	자립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
	12월 30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2015년	1월 6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7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8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9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27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대책위 가지회견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피고인 각 징역 13년)
	1월 28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1차 협의(시설폐쇄 및 탈시설논의)
	2월 25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2차 협의(특별감사처분검토의견)
	3월 2일	자립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3차 협의(검찰고발 논의) 자립성폭력대책위 민·관 대책협의회 탈퇴
	3월 6일	자립도라지 행정처분(시설폐쇄명령). 전주시
	4월 20일	자립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등 통보. 전라북도
	4월 27일	자립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5월 1일	전주자립원 및 자립인애원 행정처분(시설폐쇄명령). 전주시
	5월 14일	장애인성폭력사건 상고심 선고(기각. 피고인 2명 징역 13년)
	5월 27일	자립복지재단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
	6월 18일	자립복지재단 설립취소 촉구! 대책위 기자회견
	6월~7월	자립복지재단 설립취소 촉구! 대책위 1인 시위
	11월17일	전라북도, 자립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방침 발표

성명서

전라북도의 자립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7일) 전라북도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한 사회복지법인 자립복지재단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립성폭력대책위는 이번 전라북도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27일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고발장 접수 이후, 2014년 7월 17일 대표이사과 친·인척관계이고, 자립복지재단의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2015년 1월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5월 14일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가해자 2명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다시 한번 장애인 인권 침해의 진실이 법 앞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복지재단의 반성이 없는 파렴치한 행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자립복지재단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법인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절대로 없었다고 말했었고, 대표이사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새로 꾸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 취소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저하게 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자행하였다. 성폭력이 발생한 3개의 시설에 대한 폐쇄가 확정되어서 장애인보호라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이후 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법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자립성폭력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가 자립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부정행위들의 심각함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목적사업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자립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분명히 했다.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전라북도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시설 내에서의 집단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전라북도는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엄중하고도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립성폭력대책위 역시 장애인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자립복지재단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15. 11. 17.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립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구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구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복지전북시민연대(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ㄱ, ㄴ순, 2015.01.27, 현재)